

충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·학·연·관 협의체 출범

- 7월 27일 「충간소음 정책협의체」 첫 회의... 충간소음 제도보완 등 방안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충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·학·연·관 10개 기관*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「충간소음 정책협의체」(이하 협의체)를 구성하고,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(공공)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국토안전관리원 (학계) 건축학회, 시공학회, 소음진동공학회 (산업계)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 (연구기관) 건설기술연구원

- 협의체는 충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,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, 정책 발굴·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,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·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·기축주택에 대한 충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·학·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,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.

-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, 시범단지*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충간소음 개선 성과·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, 충간소음 사후확인제**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.

* 1차 시범단지 : 양주회천 지구(880세대, 장기임대, '23.12 준공 예정)

**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충간소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제도('22.8 시행)

-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'골든타임'으로,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, 보완 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공동주택에서의 충간소음 분쟁 해결방안, 충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.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충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”라면서,

- “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,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,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충간소음 제도·기술·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	책임자	과 장	유혜령 (044-201-3364)
		담당자	사무관	오윤택 (044-201-3366)



□ 추진배경

- 충간소음 관련 정부와 산·학·연간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통해 충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이행력 확보 필요

□ 협의체 구성 · 운영 방안

- (구성) 국토부, 공공기관(LH, 국토안전관리원), 산업계(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), 학계(대한건축학회, 한국건축시공학회, 한국소음진동공학회), 연구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
- (역할) 참여기관별로 제도 운영 · 홍보(공공), 최신기술 및 업계 동향 공유(산업계, 학계), 정책 발굴·연구(연구기관) 등 역할 수행

* (공공) 정책수립, 제도 운영 및 홍보 (산업계) 제도개선 건의, 업계 동향 공유 (학계) 기술동향 공유, 세미나 개최 (연구기관) 제도개선·기술 연구, 정책 발굴

- (제도개선) 사후확인제 등 충간소음 제도보완 건의 및 개선
- (동향공유) 포럼·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동향 및 업계 현황 공유,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및 성능검사 매뉴얼 등 연구 교차검토
- (정책발굴 · 홍보) 충간소음 정책연구 수행, 정책방향 설정 및 홍보
- (기술개발 지원) 기술개발 고도화 및 우수기술 보급 지원방안 모색

- (운영) 국토부 주최, LH 주관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, 정책발굴 등을 위한 반기별 전체회의 및 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회의 개최

※ 제도 정착, 현안 해소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**실무중심으로 운영**하고, 현안 · 이슈 대응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 外 관계기관도 초빙하여 수시회의 운영

□ 향후계획

- (시범단지) 사후확인제 점검을 위한 시범단지(LH) 모의 성능검사에 공동 참여, 운영경과 분석 및 현장 품질관리방안 마련('23.下)